지평 공공정책팀 · 지평법정책연구소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1-1호
발행일 : 2021. 9. 8. (수)
제390회 국회(임시회, 2021. 8. 17. ~ 8. 31.)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2050 탄소중립
   나. 인앱결제와 공정거래
   다. 코로나19와 디지털 원격교육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지평 공공정책팀 · 지평법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60 KT&G 서대문타워 10층 (우)03740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E-mail. newsletter@jipyong.com www.jipyong.com

입법정책브리핑 구독신청

1. 개관

제390회 국회(임시회)는 막판까지 본회의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하던 중 회기 마지막날인 31일이 되어서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임시회 특성상 짧은 기간 이루어졌지만 많은 법안이 이른바 '쟁점법안'으로서 논쟁거리였습니다.

주요 개정법률안으로는 (1)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한 「국회법」, (2)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대폭 축소한 「군사법원법」, (3)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한 「종합부동산세법」, (4) 수술실 CCTV를 의무화 한 「의료법」, (5)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의무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6)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들 수 있습니다. 제정 법률로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35% 이상을 감축하도록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등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논의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1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국회운영위원회(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2	법제사법위원회(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3	기획재정위원회(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4	교육위원회(1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의원 등 11인
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8	교육위원회(11)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교육위원장
9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박찬대 의원 등 16인
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1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1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 의원 등 10인
14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15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3인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17	국토교통위원회(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의원 등 10인
18	문화체육관광 위원회(1)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영주 의원 등 13인
19	보건복지위원회(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1	환경노동위원회(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2050 탄소중립, 인앱 결제와 공정거래, 그리고 코로나19와 디지털 원격교육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2050 탄소중립

개요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 중 그린뉴딜을 하나의 중심과제로 내세웠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파리협약과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글로벌 신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2050 탄소중립'에 발을 맞추며 국내여건을 고려한 대응책입니다.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새로 제정된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여건 개선, 양성평등의식 증진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태전환교육에 대해 규정하여 같은 흐름을 이룹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021-08-31 (원안가결)
2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2021-08-31 (원안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과제목표

’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 실현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

주요내용

(지속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18년~)하여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기후적응 역량 제고)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점검체계 구축
(범지구적 논의 동참) 파리후속협상 참여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

▼

2050 탄소중립

비전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능동적(Proactive) 대응” 도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신(新) 경제·사회구조 시스템 구축)

3+1 실행전략

1 〔적응〕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低탄소화 추진
2 〔기회〕 신(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3 〔공정〕 공정(公正)전환을 통해 전국민 참여 유도
4 〔기반〕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

▼

한국판 뉴딜 2.0

(그린뉴딜) 탄소중립 전략을 반영하여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

○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여, 2030 NDC*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 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 규모를 확대

관련 : 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관계부처 합동 2021. 7. 14.

참고 자료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1. 7. 20.

[보도자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 초안 발표 국무조정실 2021. 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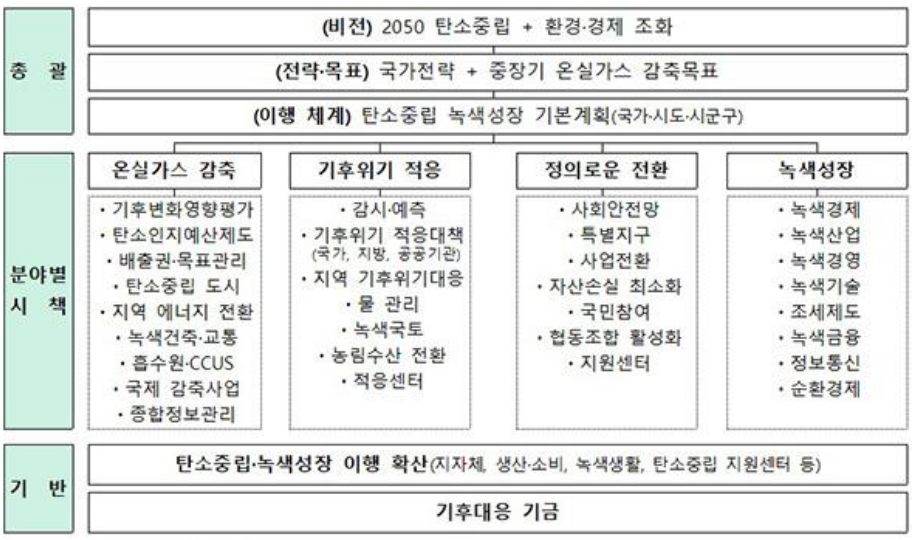
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비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설정하고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5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 각각의 대안은 (전환)석탄발전 유무, (수송)전기수소차비율, (건물)건물 에너지 관리, CCUS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1안) 25.4백만 톤, (2안) 18.7백만 톤, (3안) 0(net-zero)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기상청 2021. 8. 8.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4차 총회(7. 26. (월)~8. 6. (금)/영상회의)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2040년 중 1.5°C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과학적 근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기상청은 탄소중립의 과학적 근거를 담은 이번 보고서가 국내 정책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세계 14번째 법제화…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환경부 2021. 9. 1.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 년간 추진해 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탄소중립 실현의지 확실히 담았다 환경부 2021. 9. 1.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 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 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홍수·폭염 등)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

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 8,135억원, 5.6% 증액 편성 산업통상자원부 2021. 8. 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액 편성(11조 8,135억 원)하였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사업을 발굴하였다. (…)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기금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산업부 소관사업(5,980억 원)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22년 산업부 총지출안: 11조 2,155억 원)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경제 포커스」2021. 7. 2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중간 목표 이행]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탄소감축 목표를 점검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여 구속력을 높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전환 비용 분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탈락하는 산업, 노동자,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 한국의 (…)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ETS, 친환경 연료 사용, 내연기관 퇴출, 건축 리모델링 등에 수반하는 비용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산업의 반발을 줄이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법제 강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KEI 포커스」2021. 6. 30.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흡수하는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됨. (…) 2020년 국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을 입법하고 정부는 계획과 전략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양대 축인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재인식 및 적응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기후변화 완화'와 동등하게 병행 추진되지는 못함. (…) '탄소중립'은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나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변화하는 기후와 그 영향에 대한 '적응'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과 강화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매우 가치가 높음.

나. 인앱결제와 공정거래

‘인앱결제’란 앱 마켓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구글이 모든 유료 앱에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하여 30%의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의 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특별한 정책기조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100대 정책과제 중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인앱결제 강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하거나 조직 개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맞물려 국회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부처 간 이견 등 논의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마련.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행하는 것을 방지.	2021-08-31 (원안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과제목표

대 · 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주요내용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17년 중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업회계 규율 정비

-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확대 및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 회계법인의 독립성 · 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25→10년) 및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강화
  (형벌 : 5~7년 → 10년, 과징금한도 : 20억 → 폐지)

(이하 생략)

▼

부처별 대응

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 이용 약관의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4. 7. 7.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 또한 가격 인하 상품 및 인앱 구독은 환불이 불가능한 조항을 구입 후 제품가격이 인하되었을 때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인앱 구독에 관한 환불도 가능한 것으로 시정했다. 인앱(In-App)구독이란 고객이 앱 내에서 이용료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잡지, 신문, 비디오, 음악 등 다양한 컨텐츠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모바일 인앱 결제서비스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KCA보고서」2019. 1. 15.

최근 모바일 앱 개발사들의 수익모델별 매출액에서 인앱결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인앱결제만을 제공하는 앱이 일반결제만을 제공하는 앱보다 준수율이 현저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지침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한 것으로 앱 개발사 스스로 지침 준수율의 중요성 인지 필요. 규제에 의한 준수가 아니라 업계 스스로 준수율 제고 노력을 통한 소비자신뢰 확보 도모하여 안정적인 모바일 앱 산업 발전에 기여. 인앱결제에 대한 수수료(30%) 이득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앱마켓 사업자의 책임감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충분함. 앱 개발사들이 앱마켓에 앱을 등록시 요건사항에 지침 준수항목들을 정하여 등록하도록 해 안정적인 업계 발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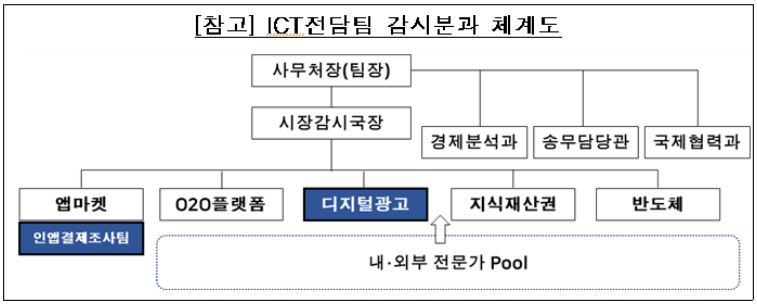
방통위, 구글 인앱 결제정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점검 착수
방송통신위원회 2020. 9. 2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구글이 '20.9.29일 구글 개발자 블로그(Google Developers)를 통해 발표한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앱마켓)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발표한 정책의 주요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및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

공정거래위원회 2021. 6. 7.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참고 자료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 11.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 9.

국민경제자문회의-기술경영경제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동 정책포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5. 28.

오위원은 독점적 플랫폼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공정수준 이상으로 부과하고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제한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등 마켓 참여자의 혁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앱사업자의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세 도입 추이와 중소개발자에게 수수료를 인하해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간 암묵적 담합이 깨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업자 간 암묵적 담합을 깨는 임팩트 있는 정책,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력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 앱마켓 시장 및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거래투명성 강화 및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각국 공정위 간 공조 병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2021. 8. 31.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금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

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미국 · 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오픈 앱마켓 법 등)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인앱 결제 방식 확대 적용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 논점」2020. 10. 8.
구글은 유료로 결제되는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 강제는 국내 콘텐츠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앱 마켓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제도를 보완하여야 하고, 콘텐츠 사업자는 각국의 콘텐츠 사업자 간의 연대를 통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앱 마켓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ICR센터·공정거래위원회]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고려대학교 icr센터 2021. 5. 6.

다. 코로나19와 디지털 원격교육

개요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기술이 맞물려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비대면 경제를 육성한다는 정책기조가 교육분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관련된 법률안 세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가장 직접 관련되는 것은「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입니다. 그렇지만「기초학력 보장법안」과「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이 필요해진 현 시기에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비대면 교육과 대면교육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연관성을 갖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교육위원회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으로써,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	2021-08-31 (원안가결)
2	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매우 시급한 문제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	2021-08-31 (원안가결)
3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공백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교실 방역, 거리 두기 가능한 대면 수업 및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있으므로 학급당 적정 학생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하 생략)	2021-08-31 (원안가결)

정책 동향

[100대 국정과제] 54.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과제목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 · 융합형 인재 육성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수-학습활동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주요내용

(지식정보 · 융합 교육)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 및 선도 핵심 교원 육성('21년, 1만 명),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 제공('20년) 및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 · 운영('18년~)

- STEAM 연구 · 선도학교 운영 확대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초 · 중등 교과 교사와 비교과교사(유아 · 특수 등) 확충,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디지털 뉴딜 부문 실행계획 중)

전국 초중고 · 대학 · 직업훈련기관의 온 · 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추진 ⇨ '25년까지 총사업비 1.3조 원(국비 0.8조 원) 투자, 일자리 0.9만 개 창출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무선망)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WiFi 100% 구축*

* ('20.6월) 8만 실 → ('20년 추경) 누적 24만 실 → ('22년) 전체 교실(38만 실)

(스마트기기) 교원 노후 PC · 노트북 20만 대 교체,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 대 지원

*선도학교에서 온라인교과서 기반 수업 · 실습사례 축적 → 교수 · 학습모델 개발

(온라인 플랫폼) 다양한 교육콘텐츠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공공 · 민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 평가 등 온라인 학습 全단계 지원

관련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발표 기획재정부 2020. 7. 14.

▼

미래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활성화 권고안

부처별 정책 대응이 교육체제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에듀테크 정책 조율과 조정을 통해 정교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함

관련 : 미래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활성화 권고안 4차산업혁명위원회 에듀테크 활성화 TF 2020.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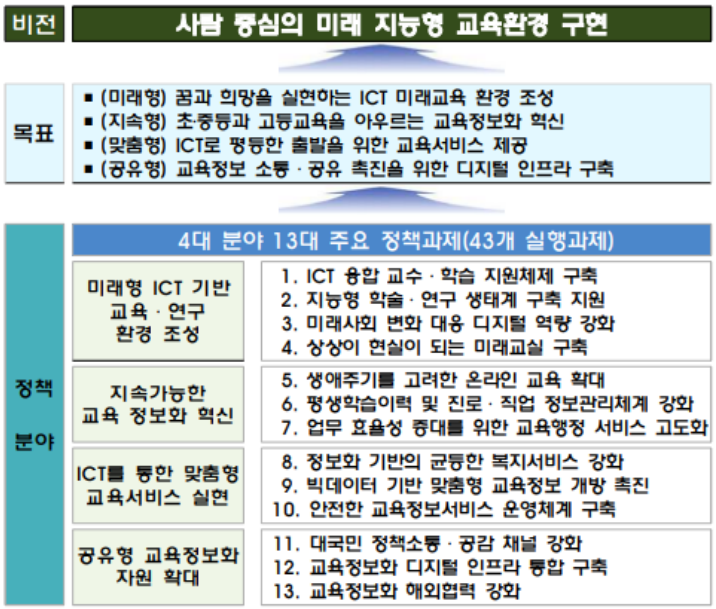
2021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및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처리규정(훈령)」

○ '사람 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제6차('19~'23)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소속 · 산하기관의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

비전 및 추진전략



관련 : 2021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교육안전정보국 2021. 3. 15.

▼

한국판 뉴딜 2.0

디지털 뉴딜 (분야별 추진전략 중)

□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

'20.7월, 「디지털 뉴딜」	⇒	'21.7월, 「디지털 뉴딜 2.0」
1 D.N.A. 생태계 강화		1 D.N.A. 생태계 강화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2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통합)
3 비대면 산업 육성		3 초연결 신산업 육성 (신설)
4 SOC 디지털화		4 SOC 디지털화

○ 국민생활·지역사회 등으로 디지털 뉴딜 1.0의 성과 확산 유도

- 교육, 의료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디지털화 확산 등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 확대

관련 :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관계부처 합동 2021. 7. 14.

참고 자료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교육위원회 2021. 2. 2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NARS 입법 · 정책」2021. 8. 19.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학급수를 늘려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등교 확대와 수업의 질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은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학급수 감소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체와 이동이 가능한 모듈러 교사(校舍) 설치 등 실용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는 2학기 개학 이후에도 일반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 또는 등교-원격 병행수업이 실시될 경우에 대비하여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학습지원 정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NARS 현안분석」2020. 12. 10.

비대면 경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가교(架橋)로서의 의미가 큼. 현재 상황에서는 비대면 경제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줄이는 불가피한 선택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대면 · 접촉 등 이른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행위들을 ICT를 매개로 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쇼핑,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에만 초점을 둔 정책적 대응에 머무르기 보다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전환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계가 디지털 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ICT 기술역량 강화, ICT 기술수용 · 활용 확대, 법 ·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임.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 (사)지평법정책연구소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최정호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jhc@jipyong.com

지평 공공정책팀 · 지평법정책연구소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